

평화재단 제67차 전문가포럼

PEACE FOUNDATION 67th FORUM

유라시아의 지각 충돌, 크림반도의 위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일시 | 2014. 4. 15 (화) 오후 2:00 - 5:00

장소 | 평화재단 3층 강당

주최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The Peace
Foundation
평화재단

유라시아의 지각 충돌, 크림반도의 위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13:30	접 수	
14:00	개 회	
14:05	여는말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14:10	사 회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20	발 표 1	크림반도의 위기와 국제 정세 변화 박정호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
14:40	발 표 2	크림합병과 북한 급변: 비교 및 대비책 우평균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교수
15:00	토 론 1	고재남 국립외교원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15:15	토 론 2	제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 팀장
15:30	휴 식	
15:45	질의응답 (발표자, 토론자)	
16:40	전체토론	
17:00	폐 회	

여는 글	4
발 표 1 크림반도의 위기와 국제 정세 변화	5
박정호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	
발 표 2 크림합병과 북한 급변: 비교 및 대비책	27
우평균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교수	

지난 3월 18일, 우크라이나의 크림자치공화국이 러시아에 합병되었습니다. 크림반도 사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많은 면에서 닮아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서쪽의 미국유럽과 동쪽의 러시아 세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는 남쪽의 마일 해양세력과 북쪽의 중러 대륙세력 사이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강대국 간 세력다툼의 장이 되어 온 것도 그렇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크림반도를 침공한 사실도 주목할 점입니다. 이러한 ‘힘의 논리’가 통용된다면, 만일 한반도에서 중국의 이익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할 경우 중국 역시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북한 지역에 무력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도외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크림사태를 바라보며,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더니 주변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는커녕 오히려 크림반도를 빼앗기고 말았다고 생각하면서 핵에 대한 집념을 더 강하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 강화가 탄력을 받고 동북아 지역에 신냉전이 초래되어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길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림반도 사태는 우리에게 여러모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제67차 포럼에 모시고 이번 크림반도 사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우리의 통일정책에 주는 교훈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크림반도의 위기와 국제 정세 변화

박정호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

- 목 차 -

1. 문제의 제기
2. 우크라이나-러시아 관계
3. 크림반도 위기와 흑해 지역 국제관계
4. 크림반도 위기 이후 국제 정세의 핵심 이슈
5. 결론 및 시사점

I. 문제의 제기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주었던 가장 중대한 국제정치적 사건들 가운데 하나였음. 크림반도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 및 강대국들의 갈등과 대립구도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듯이,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현안에 대해 러시아와 서방세계(미국과 EU)가 경쟁적으로 깊숙하게 개입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이슈는 단순한 국내 정치적인 성격을 벗어나 국제적인 관심 사안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음.
- 2013년 11월 21일부터 현 시점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 전개를 면밀하게 추적해 본다면, 우크라이나 문제의 성격과 중요성을 분명하게 파악해 볼 수 있음. 우크라이나 정부의 유럽행 중단 선언, 반정부 시위대의 정권 퇴진 운동과 참여한 대치 정국, 정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에 따른 수많은 사상자 발생, 국제적 중재자들(독일, 프랑스, 폴란드 외무장관 및 러시아 특사)의 입회하에 여야간 정치적 타협안 수용, 야당세력의 일방적 ‘2.21 합의’ 파기와 야누코비치(Yanukovich) 대통령의 러시아 도주, 야당세력 주도의 새로운 의회 다수파 형성, 과도정부의 출범과 우크라이나의 유럽행 재개 선언, 크림공화국의 독립 선언 및 주민투표 실시, 러시아의 전격적인 크림반도 합병 작업, 러시아의 우크라

6 유라시아의 지각 충돌, 크림반도의 위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나 영토 침탈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 시행 등이 연이어 발생했음. 그 결과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화될 수밖에 없었음.

- 본고에서는 크림반도 사태와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함.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전개할 것임. 첫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를 중심으로 크림반도 위기의 동인을 분석해 보고자 함. 둘째, 크림반도 위기와 흑해 지역 국제관계의 특성을 고찰할 계획임. 셋째, 크림반도 사태 이후 국제 정세의 핵심 이슈들을 점검할 것임.

II. 우크라이나-러시아 관계

가. 우크라이나 이해를 위한 키워드: ‘동(East)과 서(West) 사이에서’



출처: <http://www.dailymail.co.uk/>

-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동’과 ‘서’ 사이에 위치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두 지역의 정치와 문화를 종합해 왔던 국가였음. 여기에서 ‘동’이란 동방정교의 세계와 비잔틴의 문화 전통, 그리고 러시아 사회와 국가를 상징하는 것인데 비하여, ‘서’란 전체로서의 유럽권의 문화 및 유럽세계,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동부 유럽을 의미하고 있음.
- 특히 역사 발전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근대적 의미의 민족국가를 형성한 경험이 거의 부재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특징임.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동과 서를 대표하는 국가들의 지배와 영향을 오랜 기간 동안 받아 왔기 때문임.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는 같은 슬라브 민족이면서도 러시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역사적 발전과정을 경험해 왔으며, 이러한 차이들이 우크라이나의 독특한 민족 정체성과 대외정책이 발현하게 된 근원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음.

나. 우크라이나의 지정학과 전략적 가치

- 우크라이나는 동슬라브 형제국의 일원이자,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을 대표하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임. 특히 우크라이나가 유럽대륙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중간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음. 우크라이나가 서부 및 남서부 지역에서 중동부 유럽 국가들(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북부 지역에는 벨라루스, 동부 및 남동부 지역으로는 러시아연방, 남서부 지역은 몰도바, 그리고 남부지대에서는 흑해 및 아조프 해와 접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임.
-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 Brzezinski)는 우크라이나를 유라시아 대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정학적 추축국으로 간주했으며, 사무엘 헌팅톤(S. Huntington)은 가톨릭과 동방정교의 경계지대로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음. 또한, 알렉산드르 두긴(A. Д у г и н)은 우크라이나가 매우 모순적인 지정학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했다.
- 러시아 측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배타적 세력권이자 서방세

계와 완충지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정학적 교두보인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앙아시아-카스피해-흑해지역을 연결하는 대러시아의 에너지 안보방어선의 전진기지로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활용가치를 설정해 두고 있었음.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세력권 이탈은 NATO의 동진 확장 허용, CIS 체제의 존재 의미 상실, 흑해 지역에 대한 지배권 축소, 카스피해를 둘러싼 에너지 자원 및 파이프라인 패권경쟁에서 국익 침해 등 푸틴의 강대국 러시아 건설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 사안임.

다. 국가의 안보확립에 대한 강력한 열망

-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국가건설과정에서 국가안보의 확립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음. 신생국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라는 강력한 외부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압력 수단을 보유하고 있었던 국가였기 때문임. 2004년 대선과정과 2006년 및 2009년 가스분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직간접적인 개입과 간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성 확립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음.
- 우크라이나 정부는 안보확립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방안을 모색했으며,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선례를 추종하여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작업에 착수했음. 역사적으로 민족국가를 형성해 본 경험이 사실상 부재했던 우크라이나의 경우, 주권확립과 안전보장에 관련된 문제들이 당연히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음. 특히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취약성을 보완할 목적을 가지고 NATO와의 협력관계 구축 및 회원 가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우크라이나의 친 서방 안보정책은 본질상 서방 국가들로부터 국가발전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지원 확보와 러시아의 영향력 축소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것이었음.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럽통합 과정에의 참여를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

서, NATO와 EU 가입문제에 대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음. 우크라이나 안보 정책의 서방정향은 쿠치마의 멀티-벡터(Multi-Vector) 정책과 유시첸코의 유럽 통합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었음.

라. 우크라이나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러시아 요인(Russian Factor)

- 우크라이나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러시아 요인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이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발전과정에서 형성된 양국의 긴밀한 유대관계에 기초하고 있음.
-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 주권확보와 안전보장, 영토 및 국경문제, 에너지 수급과 가격 조정 등에 있어서 러시아로부터 강력한 대외정책상의 견제와 도전에 직면해 왔음. 특히 푸틴 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정책은 보다 강화되었음. 푸틴 정부가 러시아 국가전략의 최우선 관심사를 근외지역에 집중하면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복원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푸틴은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들 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통합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창하면서 강대국 러시아 건설을 주창해 왔음. 최근에는 각계각층의 친 러시아 로비스트들(정치계, 경제계, 사회문화계의 친 러시아 인사)을 적극 활용하면서 러시아의 이해를 실현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경제적인 관점에서, 소비에트 시기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불가분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해 왔음.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기업들 간에는 본질적으로 자원조달과 생산 및 판매 분야에 있어서 상호간 긴밀한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음. 우크라이나 경제의 기본 토대 자체가 매우 부실하고 열악한 상태여서, 서방국가 및 다국적기업들로부터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투자유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 따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밀한 경제협력만이 우크라이나의 혼란한 경제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대외교역 분야에서 줄곧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체 통상규모 가운데 대략 30% 수준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

중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적 통상 파트너이기 때문임.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 자국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의 대략 50% 이상을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임.

- 사회문화적 입장에서,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가장 유사한 역사적 발전 경험과 문화를 공유하는 동슬라브 형제국가임. 우크라이나 전체인구 가운데 러시아인의 비중이 대략 17% 정도에 달하고 있음. 게다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경우, ‘친 러시아 성향’의 정치적 성향과 사회 문화적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음.

마.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의 주요 이슈

- 독립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의 주요 현안들로는 크림반도의 영유권 분쟁, 흑해함대의 분할 및 러시아군의 세바스토폴 기지 주둔 문제, 탈러시아 성향의 국제기구인 GUAM의 결성과 활동, 오렌지 혁명, 가스분쟁,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 우크라이나의 NATO 및 EU 가입 행보, 관세동맹 (CU) 및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가입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최근 푸틴 집권 3기에 들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의 핵심 이슈로 등장한 것은 러시아 주도의 관세동맹 참여 문제임. 이것은 러시아의 강대국 건설전략과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의 재편성 작업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큰 국제적 이슈였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미래 국가발전의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매우 핵심적 사안으로 간주되었음.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주도의 관세동맹 가입과 EU와의 FTA 체결 문제 사이에서 절충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으며, 동과 서 사이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음.
- 여기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면한 두 가지 국가 전략적 선택 과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우크라이나의 국익 측면에서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음.

- 먼저, 우크라이나의 서방 정향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첫째, ‘유럽의 길’(the European Path)은 동방 정향보다 훨씬 더 도전적이고 많은 정책 과제들을 요구 받을 수밖에 없는 방안임. 이것은 우크라이나 측이 EU 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약속을 대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임.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 정부가 EU와의 가입조약(the Association Agreement)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정의 적용 중지와 인권 탄압 종식, 티모셴코를 위시한 야당인사 석방, 사법제도 개혁, 선거법 개정, 민주화 조치 등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 게다가, 정치적 과제 이외에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도 각종 개혁정책들과 개선조치들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성 있음. 하지만, 상기의 모든 요구 사항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와 통치 엘리트 집단에게 상당히 큰 정치적 부담과 고민을 제기해 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임. 둘째, 서방 정향은 우크라이나의 국익 확보에 필요한 생산적인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준비 기간과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개혁을 감수해야 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볼 때, EU와의 AA와 FTA는 자국의 최우선적 국정목표인 EU 회원국 가입으로 가는 전초 단계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임.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EU와의 AA와 FTA를 체결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단기적으로 서방 정향을 통해 기대하는 만큼의 경제적 과실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서방 정향과 비교 시에 우크라이나의 동방 정향이 갖는 정치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첫째, 러시아 주도의 관세동맹 가입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편리한 선택이라는 점임. 동방 정향은 우크라이나에게 가입을 위한 특별한 정치적 요구 사항이나 경제개혁과 관련된 필수 조건들을 거의 제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유럽의 엄격한 가입 조건들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정치경제적 변혁을 감수해야할 필요성 부재함. 하지만, 동방 정향 옵션은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경제적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안보 위협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데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 둘째, 관세동맹 가입은 우크라이나에게 단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음. 우크라이나의 관세동맹 가입을 전제로 러시아 정부는 저렴한 가격의 에너

지 공급, 산업 현대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완전한 경제통합, 2015년에 출범할 유라시아 연맹의 정회원 자격 부여 등을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임. 그렇지만, 관세동맹 가입과 유라시아 연맹 참여는 우크라이나의 서방 정향 옵션에 대한 포기를 의미함. 결국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이고 최우선적 국정과제인 EU 가입은 자동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

- 이와 같이 서방 정향과 동방 정향은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핵심 옵션임. 이 두 가지 전략적 선택 방안들 간의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서방 정향이 장기적이고 질적인 성격의 방안이라면, 동방 정향은 단기적이고 양적인 형태의 옵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전자의 경우 후자보다 더욱 많은 국가적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서방 정향은 우크라이나에게 유럽 단일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기회 허용, 발전된 기술 습득의 기회 제공, 다양한 개혁 정책 실시를 통한 사회경제적 발전 가능성 부여, 미래 유럽 통합과 유럽 정체성 회복에 대한 자신감 획득 등을 통해 미래 국가발전에 대한 분명한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음. 그렇지만, 서방 정향은 장기적인 발전과정을 필요로 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 질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변혁을 감당할 필요성이 존재함.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EU 후보국 지위 획득 여부에 대한 통치 엘리트들 간의 정치적 합의 여부도 사실상 불분명한 실정임.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서방 정향을 선택하고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하더라도,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회원 가입을 승인한다는 보장은 없음. 특히 EU의 주도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해 오고 있음. 이에 비해, 후자는 단기간에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상대적인 이점을 보유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속적으로 러시아 측에 요구하고 있는 핵심 현안인 가스 가격 조정과 할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자국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음. 또한,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러시아와 CIS 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도 유지해 나갈 수 있음. 그렇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동방 정향의 선택은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우크라이나의 유럽 정체성 회복, 즉 유럽통합 과정으로의 참여를 막아 줄 것이기에 발전된 유럽 국가건설은 불가능하게 됨. 게다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성 강화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성에 심

각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며, 자치적 통치능력을 상당부분 축소시킬 가능성도 있음.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가변혁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데 큰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의 관세동맹 지도국가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도 상당한 의문점이 있음.

<표 1> **우크라이나의 동방 옵션과 서방 옵션의 특징 비교**

	동방 옵션	서방 옵션
주체	러시아	EU
내용	CU 가입	AA와 FTA 체결
성격	단기적 양적 변화	중장기적 질적 변화
장점	특별한 가입 조건 부재 에너지 가격 조정 가능 산업 현대화 지원 자금 확보	안보 확립 사회경제적 발전 토대 구축 거대 단일시장 접근 기회
단점	러시아 의존도 증가 EU 통합 비전 상실	EU의 엄격한 가입 조건 개혁에 따른 사회 경제적 혼란

출처: 저자가 직접 작성

III. 크림반도 위기와 흑해 지역 국제관계

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 우크라이나에서 전개된 반정부 시위의 양상과 혁명세력의 권력 장악은 러시아 정부에게 심각한 정치적 및 안보적 위협으로 인식되었음. 러시아의 경우 자국 내에서 동일한 사건 발생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했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궤도 이탈에 대한 최대한도의 차단 방안을 모색해야 했음. 특히 역사적 및 민족적 동질성, 인구와 영토 규모,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의 유럽행은 푸틴 정부의 유라시아 전략, 즉 강대국 러시아 건설전략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큰 사안이었음.

- 소치(Sochi) 올림픽 종료 이후 푸틴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음. 우선적으로 러시아 지도부는 2월 21일 여야 간에 체결된 협약을 준수하라고 과도정부와 서방 국가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했음. 또한, 새로운 과도정부의 정통성을 전면 부정하면서 이들에게 쿠데타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었으며, 야누코비치 대통령 탄핵이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힐난했음. 반정부 시위 세력들이 우크라이나 헌법에 규정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탄핵을 진행한 만큼,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권력적 정통성은 과도정부가 아닌 야누코비치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음.
- 야당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푸틴 정부는 세 가지 대응 전략을 토대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면전환을 시도했음. 첫째, 동부 지역의 대표 도시들 중 하나인 하리코프(Kharikov)에 새로운 친 러시아 세력의 중심축을 형성하여 과도정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방안이었음. 이는 우크라이나의 지역적 분할구도를 활용하여 정국의 불안정성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었음. 둘째, 야누코비치의 전략적 활용 방안이었음. 러시아는 야누코비치를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권력의 통로라고 인정하면서 그의 요청을 빌미삼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정책을 구상했음. 셋째, 크림공화국의 전략적 활용 방안이었음.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가장 러시아적 색채가 강한 지역이었음. 세바스토폴(Sevastopol)에 러시아 흑해함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크림 공화국의 인구 구성상 러시아계 주민들이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 그런 맥락에서 2월 28일 러시아 군의 크림 반도 이동, 3월 1일 러시아 의회의 승인을 통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해외에서 러시아 군 병력 사용 권한 부여, 러시아 군의 크림반도 장악 등 일련의 사건이 전개될 수 있었음. 결국 러시아 정부는 크림지역의 특수성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면서 군사적 위용을 과시했으며, 마이단 정부와 서방에 대해 강력한 압력을 가했음.
- 역사적으로 크림반도는 강대국들 간의 지정학적 세력경쟁의 주요 무대였음. 흑해는 러시아의 지중해 및 에게해 진출을 위한 전략적 출구일 뿐 아니라, 유럽 접근을 위한 핵심 통로였음. 우크라이나의 유럽행은 흑해 지역에서 러시아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음. NATO의 동진 확장 허용, CIS 체제의 존재의미 상실, 흑해 지역에 대한 지배권 축소, 카스피해를 둘러싼 에너지

자원 경쟁에서 국익 침해 등 푸틴의 강대국 러시아 건설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핵심 이슈였음. 그런 이유로 푸틴 대통령은 국제적 압력과 마찰을 불사하면서까지 크림반도 영유권 확보작업에 사실상 올인(All-in)했던 것임.

나. 크림공화국 출범에 따른 러시아와 서방세계의 갈등

- 크림공화국의 분리주의 운동과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침탈행위라는 국제적인 비난이 공공연하게 제기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과감한 군사적 행동, 크림공화국의 독립선언과 주민투표 실시, 러시아의 독립 인정과 합병조약 체결 등 러시아 주도의 크림반도 병합 작업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음. 3월 21일 법적인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는 사실상 러시아의 영토로 귀속된 상태임.
- 러시아의 일방적 크림반도 합병은 우크라이나의 과도정부와 서방 국가들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했음. 이들은 크림공화국의 주민투표를 우크라이나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이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음. 그러나 러시아 지도부는 미국과 유럽연합 측의 강경한 경고조치들을 무시하면서 크림반도 귀속에 대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음. 단적인 사례로 푸틴 대통령은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역사적 유산’이자, ‘러시아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중요한 부분’ 등으로 지칭하며 크림 자치공화국 병합의 당위성을 강하게 역설했음. 그는 “1954년에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양도한 것은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개인적인 판단이었다” 라고 언급하면서 그것은 소련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였다고 지적했음. 결과적으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각종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도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나섬에 따라,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첨예한 갈등 및 대립구도가 형성되었음.
- 러시아 지도부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과 EU의 대러 제재는 상호간 건설적인 관계 발전 가능성을 훼손함은 물론이고, 지역 정세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주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제재 참여국들도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거라고 경고했음.

<표 2> 서방의 러시아 제재 내용과 제약 요인

	미국	EU
제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명 정부 관료 자산동결 및 여행 금지 • 푸틴 측근 4명 자산동결 및 여행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인사 33인 자산동결 및 여행 금지 • 비자 면제 중지
제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틴의 이너서클 인사 • 러시아 은행(가스프롬 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적 차원 2단계 제재안 결의 • 3단계 제재 시 경제제재 포함
러시아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EU, 캐나다 주요 인사 제재 • 입국 금지 및 자산 동결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제재 시행 시 맞대응 계획
제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리아, 이란 문제에서 러시아 요인 •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 러시아 요인 • 러시아와 중국 관계 강화 가능성 • IMF 예산 지원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도 •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 차단 가능성 • 러시아와 유럽의 교역 규모 • 유럽계 은행에서 러시아 차입금 비중

출처: KOTRA 신흥시장팀 자료 재구성

다. 크림 사태와 흑해 지역 국제관계의 변화

- 흑해 지역은 역사적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수송로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핵심 교통로였을 뿐 아니라, 유라시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좌우할 수 있는 군사안보적 요충지였으며, 유럽문명의 발전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쳤던 문화 교류의 현장이었음. 그런 까닭에 흑해 지역은 인류 역사발전의 수 세기 동안 특정 제국(로마, 비잔틴, 몽골, 오스만 터키, 오스트리아-합스부르크, 제정 러시아, 소련 등)의 지배권 아래 놓여 있었으며, 강대국들 간의 군사적 대결과 정치적 갈등의 진원지이기도 했음. 또한, 냉전 시기 동안 흑해 지역은 소련과 미국 사이에 지정학적 패권경쟁이 벌어졌던 대표적인 경연장들 가운데 한 곳이었음.
- 탈냉전 시기 흑해 지역은 지정학적 세력균형의 중대한 변화를 경험해야 했음. 냉전 시기 ‘소련의 호수’(Lake of Soviet Union)였던 흑해 지역에서 미국과 EU의 본격적 개입 노력, NATO의 동방정책과 세력권 확대, 흑해 연안국들의 탈러시아 행보 및 유럽 접근 움직임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음.

- 세계화 및 개방화 시기 흑해 지역의 국제관계와 안보체제의 불안정성을 한층 고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안보적 도전 과제들이 등장하였음. 코카서스(Caucasus) 지역에서의 민족갈등과 영토분쟁, 우크라이나 크림미아(Crimea) 자치공화국의 분리 독립 운동, 러시아 흑해함대의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Sevastopol) 주둔에 대한 갈등,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색채혁명(Color Revolution)과 권력변동, 러시아와 조지아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스 분쟁,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간에 진행되었던 흑해 에너지 파이프라인 노선 선점을 둘러싼 치열한 각축전 등이 흑해 지역의 대표적인 외교 안보적 이슈들이었음. 특히 2000년 이후 러시아의 급속한 경제 발전에 힘입어 푸틴 정부가 집권 2기부터 강대국 러시아 건설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함에 따라, 흑해 지역은 다시금 강대국들 간 치열한 세력경쟁의 각축장으로 부상하게 되었음. 21세기 흑해 지역을 둘러싼 국제관계와 안보환경은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성격을 함유하고 있었음.



<그림 2> 흑해 지역 지도

출처: <http://www.blackseagrain.net/information/maps/black-sea-region-map>

- 크림 사태 이후 흑해지역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성이 있음. 첫째, 러시아와 터키 관계임. 1990년대 흑해 지역의 경쟁 국가였던 양국 관계가 2000년대 들어서 개선되고 있는 추세였음. 러시아와 터키는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상호간 친선관계를 추구하면서, 에너지 협력을 토대로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그런데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러시아와 서방세계의 대립구도가 형성됨으로써 흑해 지역 안보 질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음. 흑해 지역에서는 서방과 러시아의 다자안보기구인 NATO와 CSTO가 함께 작동하고 있는 실정임. 만일 흑해 지역에서 러시아와 NATO 간의 안보적 갈등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와 터키 관계의 성격도 변화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둘째, 러시아와 유럽 간의 관계 설정 문제임. 주지하듯이, 21세기 강대국 러시아 건설 작업 차원에서 러시아의 흑해 지역에 대한 외교적 관심과 노력이 더욱 증대되어왔음. 특히 2008년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공 이후 흑해 지역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던 반면, NATO의 동방확장 정책은 이전 시기에 비해 상당히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음.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 위기의 여파로 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임. 그런데 러시아의 일방적인 크림반도 귀속으로 러시아와 유럽 관계는 현재 악화일로에 직면해 있음. 그런 맥락에서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안보적 도발에 대한 대응책 차원에서 군사안보적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이처럼 흑해 지역에서 안보적 갈등과 경쟁은 러시아와 유럽 관계 설정에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셋째, 흑해 지역에서 안보적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임. 그 동안 민족 및 영토 분쟁이 발발했던 흑해 지역에서 안보적 취약성을 해소시키기 위해 역내 및 역외 국가들 간에 다자지역 안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음. 그런데 크림사태로 인해 흑해 지역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들 간에 경쟁과 갈등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흑해 연안국의 경우 지역안보 질서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증대되고 있음. 이는 흑해 지역은 물론이고, 동유럽 및 중동 지역(시리아, 이라크, 이란 등)의 안보질서 확립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IV. 크림반도 위기 이후 국제 정세의 핵심 이슈

가.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과 대외적 이미지

- 러시아는 소치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푸틴의 장기집권의 정당성 및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위상을 널리 과시하려고 기도했음. 그런 이유로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은 개막 전부터 ‘푸틴의 올림픽’ 혹은 ‘역대 가장 비싼 정치적 올림픽’ 등의 수식어들이 붙어 있었음. 실제로 올림픽 대회 준비에 들어간 예산만 500억 달러(약 54조원)를 넘어섰을 정도였으며, 화려한 개막식과 폐막식은 러시아의 문화적 자부심을 선전하기에 충분했음.
- 그러나 크림반도에 대한 무단 병합은 국제정치무대에서 러시아의 대외적 이미지를 심각하게 추락시킬 수밖에 없음. 상징적인 제재 조치에 불과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G8의 일원으로부터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서방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들도 취소되었음. 또한, OECD가 최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회원국 가입 협상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7년부터 진행된 러시아의 OECD 가입 전망도 불투명해졌음.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지도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자국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 작업을 추진할 필요성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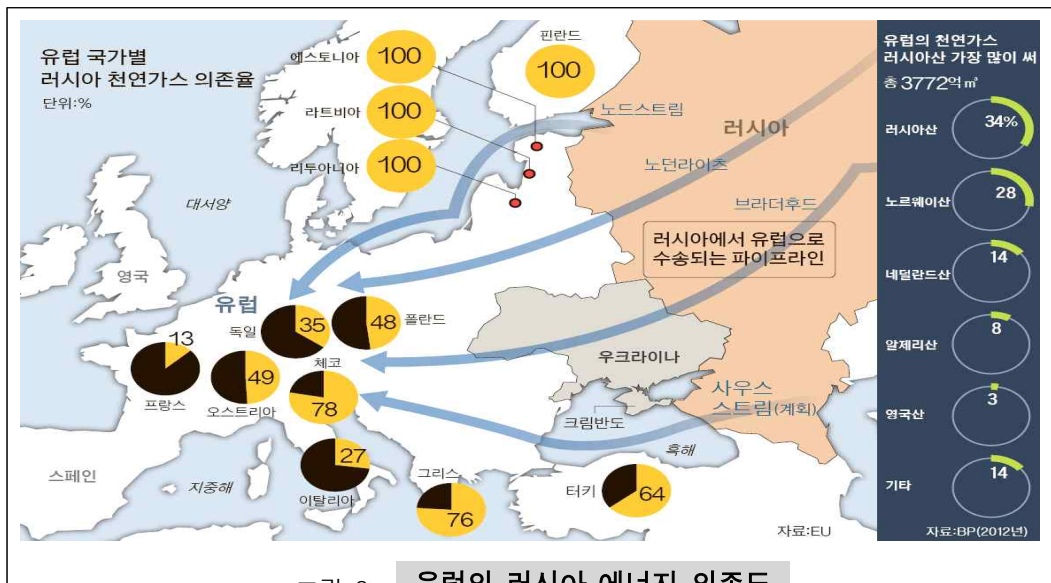
나. NATO의 역할 확대론

- 크림사태로 러시아와 NATO 관계의 재설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음. 특히 국제사회에서 NATO의 역할 확대론이 공감대를 얻고 있음. 그래서 흑해 지역 및 동유럽 안보질서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NATO의 역할이 이전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를 반영하듯이, 4월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한 데 대한 대응 방안으로 나토는 러시아와의 모든 실질적인 협력을 중단함과 동시에, 동유럽 지역에서 안보 방어 태세도 증강해 나가기로 결정했음. 안데르

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와 군사부문과 민간부문 등 모든 수준의 실질적인 협력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 현재 발트해 국가들과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안보 확립을 위해 신속한 MD 체제를 구축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또한, 일부 유럽 국가들도 군사력 확장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있는 실정임. 게다가, 유럽의 대 러시아 정책에 있어서 오랜 기간 중립주의를 표방해 왔던 스웨덴과 핀란드도 최근 들어 러시아를 자국의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NATO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다. 에너지 패권 경쟁



<그림 3>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55403에서 재인용

- 서방세계의 각종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크림공화국에 대한 병합을 완료하자,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

의 셰일가스 수입 방안이 유럽 국가들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러시아의 보복 위협에서 벗어날 목적 아래 EU는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4월 2일 브뤼셀에서 열린 EU-미국 에너지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유럽의 에너지 공급선을 다각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결정함. 결국 미국과 EU 간의 에너지 협력 강화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것임.



<그림 4> 러시아와 중국의 가스관 노선도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2014041009215358666>에서 재인용

- 러시아 정부는 서방 세계의 러시아 제재, 즉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축소 방안 에 대한 대응 전략을 두 가지 측면에서 모색하고 있음. 첫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여 유럽 국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방안 임. 특히 푸틴 정부는 우크라이나 수출 가스 가격을 대폭(81%) 인상했으며, 향 후 선불로 가스를 팔겠다고 선언했음. 4월 9일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러시아 측이 제시한 가격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을 선언했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3차 가스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 국가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큰 사안임. 둘째로 중국과의 전략적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임. 러시아와 중국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진척되지 않고 있었던 장기 가스공급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근 들어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스 수출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 대비한 러시아의 시장 다변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4월 9일 중국을 방문한 드보르코비치(Dvorkovich) 러시아 부총리의 언급에 따르면, “러시아는 5월에 가스공급 계약이 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는 “어떤 경우든 올해 안에는 계약이 발효될 것”임을 강조했음.

- 결국 크림사태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에너지 수급 구조를 변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개연성이 큰 사안임. 이는 에너지 공급자들 간의 시장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구도의 형성, 즉 일종의 지구촌 에너지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약화

- 크림 위기는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들 간에 갈등과 대립을 촉발시키고 있음. 이는 국제적 핵심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약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예를 들자면, 서방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각각 국제법 준수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해석의 차이를 보이면서 이견을 표출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크림반도에의 무장병력 진입에 대한 국제법적 적법성 여부, 우크라이나 임시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통성 인정 여부 등을 들 수 있음.
- 푸틴 집권 3기 러시아와 미국 관계는 기본적으로 갈등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음. 푸틴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에드워드 스노든의 임시망명 허용, 유럽 MD 체제 구축, 미국의 러시아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양국관계는 사실상 개선되지 않은 채 공전하고 있었음. 단적인 사례로 푸틴은 오바마가 주관하는 워싱턴 G8 정상회의와 시카고 NATO 정상회담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와 소치 동계올림픽에 불참하는

등 양국 지도자 간에 신뢰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음.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크림 위기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제재 조치를 시행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러시아와 미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 푸틴 집권 3기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협력을 강화하려는 대외정책을 수립하였으나, 크림사태의 여파로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비록 유럽의 러시아 제재의 실효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미국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러시아에 대한 일정한 거리두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러시아와 서방세계가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상호간의 대립이 지속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푸틴 정부는 CIS 지역 통합 정책과 아시아 주요 국가들(중국과 인도)과의 관계 강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 러시아는 CIS 지역 다자기구들을 활용하여 탈 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 이니셔티브’를 더욱 공고하게 구축할 것임.
- 지구촌 핵심 현안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 왔던 국제기구들의 역할도 다소간 약화될 것으로 보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G8 및 G20 등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주요 현안에 대해 갈등과 의견 대립이 발생함에 따라, 행동 일치의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음. 게다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고립 정책은 당연히 러시아 측의 반발과 맞대응을 초래하게 될 것임. 이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따라서 향후 이란 핵 문제, 시리아 사태,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이후 테러 예방 및 중동 지역 안정화 문제, 북한 핵 개발 등과 같은 국제적 핵심 이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 있음.

마. 핵 폐기 및 핵 비확산 정책의 실효성

-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우크라이나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음. 자신들의 영토를 러시아에게 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임. 이는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주는 중대한 국제적 사건이었음.

- 소련의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 배치되어 있었던 핵탄두 1,900여개를 자동적으로 물려받게 됨에 따라, 당시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핵 강대국이 되었음. 미국과 러시아는 탈 소비에트 공간에서 핵무기 비확산 정책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들 지역에서 핵무기를 폐기시키기 위해 공동의 정치 및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갔음. 1994년 미국, 영국, 러시아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폐기와 NPT 가입을 성사시킴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지원과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을 해 주었음.
- 크림사태는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부정적 여파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그 동안 ‘보상 후 핵 폐기’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핵 폐기 방안으로 간주되었지만, 이번 크림 위기는 핵 폐기 및 핵 비확산 정책의 실효성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는 사례임.

V. 결론 및 시사점

가. 유라시아 및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 요인 평가 필요성

- 유라시아 국제질서의 변동 가능성 존재
-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급 효과
- 푸틴 집권 3기 대외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 러시아의 CIS 전략방향
-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을 둘러싼 러시아의 지역 통합 전략: EEU의 경제적 영향력
-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국제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 제재에 대한 대처 능력 평가
- 러시아와 서방 간에 대립이 과연 ‘신 냉전’을 초래할 것인가? 평가

나. 크림반도 병합의 국제정치적 함의

- 국가주권과 영토적 단일성에 대한 도전

- 동북아 및 한반도 영토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 1991년 소연방 붕괴 이후 형성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 새로운 유라시아 국제환경의 출현: 다극 체제 구축의 시발점
-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주도권 확보 및 일극 형성 가능성

다. 크림 위기 이후 국제관계 향방

-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후 전개 전망
- 과도정부의 국정운영 능력: 동남부 지역의 안정화, 대선 관리, 정국 정상화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설정: 갈등과 전쟁 또는 협상과 타협
-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 설정: 갈등과 대결 또는 협상과 협력
-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설정: 전략적 동맹 강화 또는 현상 유지 P

크림합병과 북한 급변: 비교 및 대비책

우평균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교수

1. 머리말

2014년 3월 20일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State Duma)는 ‘크림(crimea)’ 합병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고, 뒤이어 상원의 비준과 3월 21일 푸틴(V. Putin) 대통령 서명을 끝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Ukraine)령 크림반도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했다.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가 러시아로 편입되는 경로가 러시아의 국내법에 의해 완료되는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러시아는 법적인 병합 조치 이전에 크림 내 우크라이나 군이 장악하고 있던 항구와 군사 기지를 완벽하게 장악하여 물리적으로 크림을 점령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출병이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V. Yanukovich)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요구가 없었더라도 러시아가 군대를 파견하여 크림을 점령했으리라는 가정은 러시아가 그동안 보여준 행적을 감안할 때, 충분히 성립할 만하다. 러시아는 이미 2008년 8월 베이징올림픽이 진행되는 기간에 조지아(Georgia)의 남오세티야(South Osetiya)를 공격하여 소연방 붕괴 이후 처음으로 지상군을 외국에 파견하여 전쟁을 감행한 바 있다. 영향권을 확보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처럼 선제

적인 공격과 전쟁 수행으로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사실 소련 시대에도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전쟁을 제외하고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약 6년 만에 다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이 진입함으로써 적어도 발트국가들을 제외한 구소련 공간, CIS(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범위 내에서 러시아가 목표를 두고 있는 이익 수호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지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와 EU(유럽연합, European Union)와의 제휴를 중단하기로 한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시위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하면서, 사태의 방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 개입과 영토합병으로 비화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었지만, 적어도 푸틴의 러시아만큼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방침에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이 사건의 진전 과정 속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2013년 말 이래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인접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해당 국가를 둘러싼 힘의 공백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강대국이 존재한다면, 그 강대국은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상한 사태에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행동한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가 그런 존재라면, 한반도, 특히 북한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급변사태 발생 시 힘의 공백을 용인할 수 없는 인접 국가로는 중국을 단연 손꼽을 수밖에 없다. 북한과 같은 민족이면서 북한지역을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제외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 중에 중국에 비견할 정도의 확고한 이해관계를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결국 러시아의 크림 합병이 한반도에 제시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은 한반도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같은 존재가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여 그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며, 이를 위해 크림합병의 일반적인 시사점을 제시한 후, 크림합병과 북한 급변사태의 발생 시 비교할 수 있는 양자 간의 공통적인 사항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양자 간 비교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둘 수 있다. 본 글은 이 같은 일련의 서술을 통해 러시아의 크림합병에 대해 단순히 2014년에 러시아의 영향권 내에서 나타난 국제적 격변으로 이해하는 데서 벗어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합병이 현재와 미래 한국에 주는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2. 크림병합의 시사점

러시아의 크림합병과 국제사회의 ‘사실상의(de facto)’ 묵인 과정과 그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크림합병은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인 ‘현실주의(realism)’의 정당성과 근거를 다시금 확인해주는 사례가 되었다. 탈냉전 이후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 전, 이라크전쟁 등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지만, 민족분규에 의한 분리독립이나 테러와의 전쟁 명분으로 치러졌던 이 전쟁들에서는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한 전쟁 수행 과정과 결과를 추구했었다. 즉 탈냉전의 질서를 냉전 시기처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워도 국가 간의 힘의 추구를 목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특히 영토획득을 목적으로 이웃 국가를 침략한 사례는 걸프전 외에는 없었기에 국제정치에서 전쟁을 발발하거나 병력을 동원해 힘의 우위에 기초하여 적나라한 이익을 추구하는 실례를 오랫동안 국제사회는 경험해 보지 못했다. 러시아가 조지아에 이어 우크라이나의 영토에 군대를 투입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구소련 영역에서 러시아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데 대해, 미국과 EU는 초보적인 제재조치 이외에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러시아의 힘을 인정한 결과가 되었다. 이를 통해 적어도 러시아나 중국처럼 힘으로 지역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군사 강국에 대해서도 세계가 군사력으로 맞서기 어렵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고, 러시아는 고전적인 현실주의 이론대로 ‘힘’으로 ‘정의되는(define)’ 이익 개념을 실현했고, 미국과 유럽에게는 러시아의 이익에 비견될 정도로 비중이 덜한 각자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익을 위해 군사력의 사용 같은 위험한 대가를 치를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

러시아와 미국 및 EU 간에 이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익의 비중이 다름에 따라 포기하게 된 것에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주권 뿐 아니라, 핵포기에 따른 국제사회의 합의도 힘의 논리에 따라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포함된다. 소연방에서 독립 후 1994년에 세계 3위의 핵무기 전력을 갖고 있던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보장받기로 했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러시아는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체결 당사국들이 지켜줄 수 없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크림합병은 국제 핵질서 수립의 역사에서 좋지 않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비록 양해각서(MOU,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전략핵과 관련해서 20세기에 구축했던 국

제적 합의의 준수 원칙이 일거에 무너져 내리는 현실은 당장 한반도에 핵을 갖고 있는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계없이도 원래 핵을 포기하려 않았겠지만, 향후에 우크라이나의 핵포기가 우크라이나 주권 유지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되새길 명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크림합병을 통해 국제정치에서의 현실주의 원칙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영역으로 지정학에 바탕한 국익 추구가 당연시되는 관점을 추가할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 요충지, 특히 군사적 거점에 해당되는 지역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러시아에게 오랫동안 크림은 타국이 아니라 러시아의 소유로 잠재적으로 인식하는 심리구조가 존재해왔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유럽으로 향하는 길목이며, 반대로 유럽으로부터의 침입을 지켜주는 완충지대이다. 또한 크림은 러시아 최정예 해군의 기지로 2세기 이상 존속해 왔다. 따라서 러시아가 크림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염두에 두지 못한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미국과 EU 모두의 실책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정학적·역사적 변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 외교정책의 한계가 부각된다.¹⁾

둘째, 크림합병은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나라들(regional hegemon)이 실행 가능한 사례이며, 향후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가능성이 높다. 냉전이 끝난 후 세계적 인 패권 국가(hegemon)로 미국이 부상하면서, 국제지역 수준(international regional level)에서 패권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만이 유일하다는 인정을 받았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 그 중에서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다른 나라들이 넘볼 수 없는 지역패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소련이 붕괴한 후에는 미국 이외에 어떤 나라도 국제 지역 수준에서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확립을 당연시하는 시각이 대두했다. 중국이 2000년대 이후에 군사력을 급격하게 강화하면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행보를 과시하기 시작했지만, 중국이 군사적으로 동북아 및 동남아 일대에서 타국의 영역을 확보하거나 위협을 가한 적은 없는 상태이다. 러시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적어도 CIS 권역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표명했고, CIS 권역 내에서 이에 대해 힘으로 맞서 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1) Aaron D. Miller, "Foreign Policy: Our Place in the World," Foreign Policy, March 21, 2014, http://www.wacotrib.com/opinion/columns/guest_columns/aaron-david-miller-foreign-policy-our-place-in-the-world/article_30d6e300-53c1-54de-94b8-a3ed0b2fa0ed.html (검색일: 2014.4.8).

상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군사비 감축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도 패권을 행사하고 있는 북미대륙이외의 지역에 여건상 개입하기가 어려워졌고, 이에 더해 미국이 추구해야 할 절대적인 이익과 구체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크림반도는 미국의 핵심 이익이 아닌 곳으로 굳이 러시아와 싸울 필요가 없고, 물론 러시아가 반대하겠지만 향후에 우크라이나를 나토 진용에 편입시킨다면 미국에겐 대안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Obama) 대통령 집권 이후 이집트와 시리아 사태에서 미국이 보여준 관망의 태도도 미국 힘의 한계를 이를 입증해 준다.

셋째, 러시아의 힘을 통한 우크라이나 일부 장악 시도는 유럽의 군사·안보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냉전 종식 후 유럽의 다자안보기구인 나토(NATO)는 동유럽 쪽으로 회원국을 늘리는 등 외형을 확대해왔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전통적인 강국들은 군비를 축소하면서 과거에 비해 군사적으로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러시아 군사력의 질과 양적인 면은 차치하고, 러시아가 CIS 지역에서의 지배권을 확고히 하는 데서 더 나아가 동유럽으로 까지 위협을 가하는 위협 국가로 등장한다면 유럽으로서는 기존의 군비 경시 정책을 재검토할 상황이 될 것이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 나토 차원에서 안전 보장을 도모하고 군사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할 개연성이 높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은 EU의 단결 강화를 초래하면서, 유럽군비 강화 효과 및 유럽 안보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작용한 셈이다. 그동안 미국은 유럽의 군비증강을 원했지만 유럽 주요국 군비는 늘지 않았다. 크림 위기 이후 나토가 역할을 강화하고 유럽의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유럽안보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군사력 외에 유럽은 기존에 문제로 인식해 왔던 유럽의 대러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본격화할 것이다.

넷째, 러시아와 유럽 및 미국 간의 대립 국면이 당분간 조성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본격적인 신냉전이 도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단 러시아는 과거의 소련과 비교할 때 그 위상이 현저히 낮다. 어쨌든 과거에 냉전이 그랬지만, 신냉전 기류가 형성되려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산업 등 모든 측면에서 러시아와 서방과의 협력이 중단되거나 정체되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정치·경제·군사 등 제한된 몇몇 주요 영역에서 대러 재제가 서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시민사회의 교류나 협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재제 역시 푸틴 측근 몇몇 주요인사에 대한 제재 및 금융을 중심으로 상징

적인 몇 가지 조치만 이루어지고, 경제 전반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 이미 러시아가 행위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경제체제의 복잡성과 상호연관성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러시아만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연계된 서구의 경제도 일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제약이 지속되는 상황을 놓고 서구에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다섯째, 러시아 국내정치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크림병합으로 인한 푸틴의 지지도 상승이 가능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측이 불가하다. 현재와 같이 푸틴의 인기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러시아의 국내 상황이 얼마든지 변할 가능성도 높다. 크림 합병과정에서 러시아인 보호와 크림의 주권을 러시아로 귀속시킨 조치가 강대국으로서의 자긍심 고양을 통해 국민들의 위신을 높여주는 데는 기여했기에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했지만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크림합병에 대한 서방의 불승인과 뒤이은 대러 경제 제재는 사업 가치를 잃도록 러시아 재벌을 유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러시아내 외국 투자자본의 유출 및 서방의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제재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족의식의 고양은 국민 개개인의 경제생활 개선에는 영향을 못 미치면서, 오히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푸틴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민족주의는 국내정치에 동원하기 가장 용이한 수단이지만, 민족감정 하나로 지지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 민족주의를 계속 유지하려면, 제2, 제3의 크림합병 같은 고강도의 사전기획이 필요한데, 이를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점은 자명하다.

3. 우크라이나와 북한 및 한반도 상황: 급변 비교

1) 공통점

(1)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 유지

2013년 말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일련의 비상사태의 전개는 한반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이를 고려하려면 미래 한반도에서 일어날 사건과 연관성을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서의 비상사태는 북한이 한국을 남침하는 제2의 6·25 발발과 같은 전쟁을 제외하고는 북한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급변사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단 북한 급변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서 논자들이 제일 우려하는 사태는 중국이 군대를 북한에 파견한다는 가정이다. 즉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및 크림합병 과정에서 러시아가 했던 역할을 북한에서 할 것이라는 전제를 당연시하는 이 시각 속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인접국인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같은 시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히 크림을 한 나라로(러시아 영토로) 간주하고, 중국은 북한을 외곽국가로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 결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오랫동안 폴란드와 함께 속국화 했듯이, 중국은 베트남, 티베트, 몽골과 함께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속국화 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한반도를 중국의 안전을 위한 완충지대로 남겨두려는 의도는 명나라 이후 역사적으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존속해왔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북한 급변 시 중국이 영향력 유지를 위해 북한에 무조건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는 견해와 중국이 단독으로 진입하기보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의 하에 중국도 일원으로 참여하는 경로를 선호할 것이라는 주장이 병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북한 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인접 강대국의 영향력 유지 의사는 단순히 인접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략 및 군사적으로 요충지일 뿐 아니라, 위협적인 외부세력이 진입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기에 가능하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한·미·일 3각 동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전선의 일환’으로 북한의 존재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틀은 과거에 중국, 소련, 북한 등이 유지하던 ‘북방3각’은 과거만큼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남방 3각’은 여전히 유지될 뿐 아니라 더욱 강고해지는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중국에 불리한 이 같은 구도를 해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북한을 중국의 우호세력으로 큰 틀에서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완충세력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북한에서의 정권교체 더 나아가 조선로동당 지배체제의 와해는 중국의 이익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이 예측 가능한 한반도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의 현 지배체제 유지를 원할 것이다.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선거에 개입해 우크라이나 국내정치를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노력했듯이, 중국이 북한의 내정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큰 틀에서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북한 체제가 유지되고 정권의 안정성이 보장되기를 원한다는 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반러 및 반중 정권 수립 불원

앞서 언급한,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북한이라는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는 구체적으로 인접국에서 반러시아적이거나 반중적인 정권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저지하려는 시도를 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으로 들 수 있다. 러시아는 이미 수차례 우크라이나 총선과 대선 등 주요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러시아에 유리한 후보, 다시 말해 친러정책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던 전력이 있다. 2004년 오렌지혁명도 부정선거와 러시아의 과도한 개입이 대중의 저항에 부딪치면서 초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중국은 북한 또는 통일된 한반도에 반중국적인 성향의 정권이 수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한반도 위기 상황 혹은 북한 급변 사태로 인해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이로 인해 중국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부여하는 완충국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중국은 이를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위기사태의 결과로 인해 북한을 포함한 통일된 한반도에 반중국적 성향의 정권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중국은 어떻게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²⁾

크림반도와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와 반러 및 반중 정권 수립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동일한 반면, 정권 수립 이후의 상황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역사를 통해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를 형성해 본적이 없었고, 소연방 붕괴 이후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국가를 만들어 이끌어 왔다.

국민국가로 출범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근대국가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소련이 만들어놓은 구 산업구조의 연관성과 상호의존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경제적으

2) 박병광,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비한 중국의 외교·군사 전략,” 2013.02,

<http://www.sdjs.co.kr/read.php?quarterID=SD201302&num=676> (검색일: 2014.4.7).

로 독립적이지 못했으며, 안보 역시 취약한 상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비롯해 정치, 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개입하기 용이한 환경에서 존립해왔다. 러시아의 개입은 우크라이나 정세를 설명하는 데 있어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작용했으며, 현재와 미래에도 여기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개입은 전략적 및 군사적 차원에서 판단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역사적으로 몇 차례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1948년 이후로 남과 북에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되고 분단체제가 60년 이상 경과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조선시대까지 개입했던 것과 같은 종주국 및 속국을 주변에 거느린 대국처럼 행동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은 물론, 북한이 같은 공산체제라 하더라도 엄연한 주권 국가로 자처하면서 북한이 중국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두는 정책도 시행해왔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을 조종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실제 상황을 의도한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실행력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했던 정도로 강력하지는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중국에 대한 거부감은 상존해왔으며, 중국이 급변사태 후라도 북한 정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한 것처럼 개입한다면 북 측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에 대한 반감이 절정에 달하면 중국을 축출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날 수도 있다.

(3) 정치권의 분열과 안보의식 해이

크림합병과 북한 급변 시 비교 가능한 사항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인접국인 우크라이나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 유지와 반러 및 반중 정권 수립 불원이라는 요소를 앞서 서술했지만, 이것은 인접 강대국이 취할 수 있는 인식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강대국의 정책 대상이 되는 인접 국가, 즉 당사국이 취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사국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으로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정치권의 분열과 총체적인 안보의식 해이”를 들 수 있다. 여기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처럼 북한 급변 시 당사국이 아니라, 북한이 해당국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황을 제시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처했던 환경이 한국과 유사한 측면도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을 대상으로 고려하려는 점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아무런 저항 없이 국토의 일부를 러시아에 내주었지만,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무기력함과 정치가의 무능은 국가 성립 이후 만성적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었다. 우선 국제사회의 비핵정신을 존중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외부 지원의 긴급성에 입각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량의 경제지원을 받은 것은 합당한 일이었지만, 핵포기 이후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방력 유지·강화를 경시하고 안일한 안보태세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냉전 종식 후 평화에 취해 자주국방을 포기하다시피 했다.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병력을 감축하고, 그 대신 경찰력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군대를 약화시키는 정책을 실시한 데는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우크라이나의 대러 저항력을 약화시키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이를 각성하고 타개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데서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육군 총 4만 1000명 중 실전 투입이 가능할 정도의 훈련을 받은 정예 병사는 6,000명에 불과했다. 세바스토폴 해군 사령부에 배치된 전투기 25대는 대부분 낡고 고장 나 실전 투입이 가능한 것은 4대에 불과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된 데에는 부패가 작용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할 당시만 해도 총 병력 78만 명에 1200기가 넘는 핵무기를 다수 보유한 세계 5위권의 군사 강국이었다. 그러나 군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패 정치인들이 돈 되는 첨단무기를 모두 빼돌려 자신의 몫으로 챙겼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는 낡은 소총만 지급되었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320억 달러(약 34조원)에 달하는 무기가 증발했음에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보다 최근인 2009년 최악의 경제성장률(-14%)을 기록하는 등 경제난이 겹치면서 우크라이나는 군 개혁을 시도할 엄두도 못 냈다.³⁾

반면에 우크라이나가 대적했던 러시아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사실 알려져 있듯이, 러시아 군대의 수준이 세계적인 강군의 대열에 합류시키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점들이 소연방 말기부터 노출되기 시작했다. 러시아군은 소련 시대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러시아 출범 이후 2차에 걸친 체첸전쟁 및 2008년 조지아와의 짧은 전쟁에 이르기까지 군비와 정신전력에 허점을 많이 드러냈고, 통신, 지휘 등 특히 현대전의 추세인 종합적인 작전능력을 전개하는 데 심각한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 결과 러시아군의 노후된 무기를 개선하고, 작전능력을 갖춰 즉응능력을 고양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국방개혁이 2008년부터 푸틴에 의해 본

3) 『조선일보』, 2014년 3월 27일, A16.

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결과 러시아군이 처해있는 환경이 과거 소련 때처럼 미국에 견주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소련 붕괴 후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기 직전까지 전력이 하락했던 1990년대의 러시아군의 수준을 탈각하고 강군을 향해 거듭나고 있다. 결국 러시아군 전력이 약화되었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상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군대였음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전열을 갖추 최소한의 대응을 하고, 우크라이나군의 피해가 나는 상황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사수했다라면, 그 결과가 러시아의 손쉬운 크림합병 같은 식으로 되리라는 보장도 없었을 것이다. 2013년 3월 19일 친러시아 자경단 200여 명이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있는 우크라이나 해군 사령부를 급습했을 때, 사령부를 지키던 우크라이나군 1만여 명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과 전력 차이가 나긴 하지만, 만일 폴란드나 핀란드 같은 나라가 같은 러시아의 침입을 받았다면 항전하여 러시아 뜻대로 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국민에게 국가를 운영하고 보존하도록 특전을 주는 역사의 예외는 없었기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굴복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한반도에서 북한은 핵을 비롯한 첨단 군사력을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군사력에 대한 집착은 김정일 정권보다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징후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는 일련의 정책이 공표되고 있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 군대가 갖고 있는 전력은 주한미군과 더불어 북한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비대칭적인 군사력을 비롯해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를 계속 노출하고 있다. 즉 한국은 군비와 자금 등 여건상 북한에 앞서있지만, 정신력과 임전태세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정치지도자들의 부패와 무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북한 지도부가 공통점이 있으며, 안보 대책 소홀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국익수호를 위한 정치권의 단합 미비라는 점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이 유사하다. 물론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환경 및 정세와 한반도의 그것이 차이가 많이 있고, 대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지만, 국방력을 유지하고 외부 위협에 대처하는 안보에 대한 관념과 정책은 나라마다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근대국가의 정규군이 최소한의 저항도 없이 무기력하게 항복했다는 점에서 힘

이 지배하는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방위력의 본질에 대해 인식하게 해주는 새로운 사례가 되고 있다.

2) 차이점

(1) 당사자의 개입 요청

크림 위기로 비화된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행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퇴임 위기에 몰리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푸틴은 기다렸다는 듯이 군대를 파견해 크림합병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야누코비치가 러시아의 크림병합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뒤늦게나마 표명했지만, 자신의 개입 요청이 필연적으로 러시아가 러시아인들이 인구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지역에 군대를 파견해 러시아의 지배를 절대화 하려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는 다만 자신의 권력 유지가 지속되기만을 원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한반도에서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중국이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는 북한의 요청이 있을 경우이다.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처럼 개입요청을 받고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북한에 개입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대안이 되겠지만,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국제법적으로 북한정권 내지 주도적인 정치주체에 의한 ‘개입 요청(intervention by invitation)’은 북측이 묵인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급변사태에 대한 외부의 물리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북한 당국이 중국에 개입을 요청할 가능성 또한 대단히 낮다. 그 밖에 북한과 중국 간의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1961.7.11)’을 근거로 조약에 의한 개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국이 이러한 주장을 제기할 지는 의문시된다.

북한 내부의 붕괴로 인한 급변상황 속에서 “침략”의 명백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조·중조약에 근거한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 만약 북한정권의 요청에 의해 중국의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조약에 의한 개입이 아니라 명시적인 요청에 의한 것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⁴⁾ 이 경우도 중국은 현실적으로 UN 안보

리와 기타 이해당사국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비록 일방적인 개입을 시행하여도 조기철수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북한의 질서유지와 재건에 대한 막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비난이라는 커다란 비용을 감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 개입의 유일한 국제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중조약이 갖는 의미로 일각에서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남측 단독 또는 남측과 미국이 연합하여 북측 지역에 개입할 때, 이를 북측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하여 중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곤 한다. 1961년 조약에 기초하여 또는 조약과 별개로 북한의 요청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이 합법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북한 지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북한 지역에 대한 남측의 개입이 어떤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는가이다. 예를 들어 북한급변사태와 관련하여 UN 안보리 등에 의한 지지 또는 용인(blessing) 하에 북한 지역에 대해 개입하는 경우, 무력공격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중국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 여부는 애초부터 배제될 것이다. 또한 북한 당국으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중국이 개입하는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을 이유로 한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은 배제될 것이다.⁵⁾

(2) 핵보유 여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북한이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긴 우크라이나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몇 개를 갖고 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어쨌든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차이이다. 북한은 1993년 3월 제1차 NPT 탈퇴와 더불어 핵개발 의도가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관되게 핵보유 의지를 지켜왔으며, 이미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을 다수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왔다. 북핵은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역행하면서 진행된 결과,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recognize) 없으나 사실상 핵을 보유한 국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accepted) 나라가 되고 말았다. 북핵

4) 이근관, “북한위기상황 시 주변국의 개입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논리에 대한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2호(2011), pp.57-58.

5) 우평균, “북한의 내파 및 급변사태 시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 『평화학연구』 제14권 4호(2013a), pp. 238-239.

을 폐기하기 위한 유일한 전문 협의체였던 6자회담도 중단되기에 이르렀고, 6자회담의 재개도 요원한 실정이다. 핵을 보유한 상태로 북한이 존재하는 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위시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북한 급변 시 북핵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의 핵포기 사례는 그동안 카자흐스탄의 핵포기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핵포기의 전형이 되어왔다. 우크라이나가 독립 당시 제조 가능했던 핵무기 수는 1,240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독립 당시 176곳의 전략미사일 저장고를 갖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600개의 공중발사 미사일, 3,000개의 전술 미사일, 5,000개의 전략전술 미사일, 수많은 전술핵탄두 운송수단과 지휘본부, 저장고, 지원정비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⁶⁾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핵 보유 여부에 대한 논쟁을 국내에서 진행했지만, 결국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핵카드를 사용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990년대 말까지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핵무기 보유 필요성에 대해 꾸준한 논의가 있었으나 대통령 및 일부 지도자, 대다수 국민들의 비핵화에 대한 지지가 우크라이나 내에 양분된 찬반의견을 하나로 종합하게 하였고, 이후 우크라이나는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나타냈다. 우크라이나 핵포기에 대한 국제적 보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과 러시아 등 5대 핵보유국이 함께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대가로 주권과 영토를 보증하기로 했던 1994년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방식을 따라 핵을 포기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핵을 개발한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도가 검토되었지만, 북한의 핵개발은 계속되고 있고,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북한정권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급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치명적으로 위협해진다는 기존의 인식을 더욱 강화하면서, 핵포기가 체제 및 정권의 안전보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근거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론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푸틴 대통령이 크림을 점령하면서 북핵 문제까지는 연계해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이를 고려했다라도 크림에 대한 러시아의 이익이 북핵 포기 보다는 더 큰 사활적인 것으로 인식했기에 크림합병이 가능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6) Global Security Org (2010), Ukraine Special Weapons.

(3) 미국 및 UN의 개입 정도

러시아의 크림합병 조짐에 대해 미국과 UN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대책을 세워놓고 있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미국이 설사 해당 정보를 갖고 있었더라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적으로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는 정책을 펴왔지만,⁷⁾ 정작 크림합병 등 우크라이나의 운명적인 변화기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러시아를 비난하고 몇 가지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는 행동 이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일종의 국외자로 전락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익은 군사 작전을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개할 경우 미국이 감수해야 하는 피해보다 적은 수준의 이익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총량적으로 적더라도 미국이 안전하게 추구할 수 있는 길이라면, 이를 선택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미국이 뒤늦게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 취하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와 동유럽에까지 세력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조치일 뿐이다. 따라서 미국의 이 같은 행위가 러시아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 급변 시 한반도에서 미국은 군사력 전개를 포함하는 강력한 개입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1차적으로 핵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막고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대량살상무기와 북한에서 탈출한 이주자들이 중국으로 유출될 경우, 중국은 통제가 불가능해 질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단독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개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 입장에서 친중 정권을 북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중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외면할 수 없겠지만, 급변사태 시 북한에서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중국 단독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주변국들과의 타협에 의한 ‘협조적 개입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가장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협력인데,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중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현실적인 방안으로 유엔을 통한 개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즉, 중국은 미국과의 협조적 개입이 여의치 않고 북한 급변사태가 자국의 이익을 급격하게 훼손한다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움직여 북한에 대한 공동 관리를 요청할 가능

7) 우평균, “2013년 푸틴의 압박과 우크라이나의 EU 접근 좌절 과정,” 『e-Eurasia』 제49호(2013b), pp. 5-8.

성이 높다. 유엔에서의 개입 방식은 평화유지군(PKO, Peacekeeping Operations)을 통해 인도주의적 임무 수행의 명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려 할 것이다.⁸⁾ 단 다국적군 개입은 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유엔주도하의 개입’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차선책으로 추구될 수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어떠한 나라의 유사사태에도 개입한 적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즉, 어느 한 나라의 내란, 소요사태, 정변, 붕괴 등의 사태에 개입한 적이 없다.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다자적 개입은 UN의 평화유지활동이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UN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해왔고, 이를 통해 소요사태에 처한 국가의 질서와 안정 회복은 물론 국가재건사업에도 적극 기여해왔다. 중국이 최근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중국의 이미지, 위상 및 영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이 점은 시사적이다. 중국이 이미 캄보디아, 동티모르 등 중국 인접지역의 평화유지 활동에서 기존의 ‘내정간섭’에 대한 반대라는 원칙론을 포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⁹⁾ 만일 미국과 중국이 합의구조를 이루어 논의를 해나간다면 이 틀 내에서 양국이 협의할 구체적인 내용이 무척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사안들을 논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 이후 적절한 시기에 UN에 한반도 문제를 위임하여 북한에 과도체제를 구성한 뒤에, 궁극적으로 북한 지역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정부수립을 추진하는 방법이 한반도의 장래를 희망적으로 만들 것이다.

4. 한국의 대비책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러시아의 영토로 합병한 사태와 더불어 이에 뒤따르는 국제적인 지각 변동은 동아시아 및 한반도와 대체로 무관한 듯이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같은 관점은 평면적인 것이고, 한반도에 전개될 미래 상황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러모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제체

8) He Yin, “China’s Policy on Peacekeeping Operations,” Asia Paper Series, Stockholm: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2007; 주재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담론,” 『글로벌정치연구』 제3권 2호(2010), p. 75.

9) 우평균(2013a), pp. 239-240.

제의 속성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국제 체제 내의 모든 지역과 국가들에 편재하는 공통적인 특성이 적용가능하다. 국제정치학의 오래된 명제인 국제체제의 무정부적 성격과 국제정치체제의 구조라는 현실에서는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벗어나기 힘들며, 국제정치체제 내의 구성원들은 구조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조건을 갖고 있을 따름이다. 이 같은 국제정치체제의 성격을 전제로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이 염두에 두고 고려하거나 대비해야 될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급변을 비롯한 한반도 위기 사태 발생 시 중국의 무력개입을 당연시 하는 등 중국의 행태에 대해 어떤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 또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 평가와 목표 및 역사적 경험 등 다양한 요소에 의거해 자신의 행동방식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위기상황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그것이 중국에 미칠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타진한 후 이해득실에 따라 대응의 방도를 결정할 것이다. 결국 중국이 한반도 위기사태 발생 시 한국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규정하기보다는 우리의 협조세력 내지는 지지 세력이 되도록 긍정적 관점에서 사고할 필요성이 있다.¹⁰⁾

둘째, 크림합병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우크라이나 군대처럼 무기력한 군대는 현대 국가들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우크라이나 군이 무력화된 데에는 군의 잘못보다는 정치인들의 무책임성이 더 크게 작용했다. 안보의식이 해이한 지도자는 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 군이 싸워야 할 상대에 대한 인식조차 흐리게 하는 결과를 빚어낸다. 이런 점에서 군대의 질도 중요하지만, 결국 군대의 높은 사기를 유지하는 데에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단합된 정치인들의 자세와 리더십이 요구된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잃고 난 뒤에야 국방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실패한 하나의 전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다시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다룰 수밖에 없는 도구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군대와 정치권이 공통의 안보의식 하에 단합하여 강군을 만들고, 정신적인 사기를 고양시키는 국방개혁에 매진한다면 어떠한 한반도 위기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10) 박병광(2013).

셋째, 앞서 언급한 군대의 사기는 국민의식과 함께 고양될 수 있는 요소이다. 우크라이나의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도 마찬가지였지만, 국민들 중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을 축출하는 문제 외에도 닥쳐 올 사태를 미리 예측하거나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지는 않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및 우크라이나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결부시켜 볼 때, 치명적인 국토의 상실에 대비할 만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개인과 집단이 부재했다는 데에도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한계가 드러난다. 정치인은 필연적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데 골몰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국가적 과제에 대비하기 보다는 목전의 이익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시민사회 내의 개인과 집단은 보다 자유롭게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북한에서의 급변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필연적인 경로를 통해 북한체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한계에 봉착했다. 우리에게서 중국 정부 차원의 개입을 당연시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중국의 양식 있는 시민사회의 구성원들과 연대하여 한국의 유사시 개입의 정당성을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넷째, 북한 급변은 물론 21세기 한반도의 장래와 결부하여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 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중국을 비롯하여 러시아까지 지지하는 구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언론과 시민사회의 동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기고 및 홍보 작업을 담당하는 지식인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통일의 미래가 가져올 기대를 설명하고 주변 국가들 및 세계의 주요 국가 정상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대통령 혼자서, 그리고 정부의 공식 기관 몇몇이 담당하기에는 광범위한데다가 정권 5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과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민사회 내의 작업이 요구된다. 크림사태를 통해 크림반도의 주인은 러시아인임을 공식화시킨 푸틴 러시아의 노력은 확고한 것이었다. 한반도의 주인은 물론 한국인이지만, 운영의 형식은 대한민국이 노력하고 만들어 놓은 헌정 질서의 전제, 즉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해야 할 과제를 본격화해야 한다.

5. 맺는 말

본 글을 통해 2014년 3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러시아의 크림합병을 포함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점이 될 만한 내용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제공하고자 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크림합병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향후에 여러 차례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2014년 5월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는 또 한 번의 분수령이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측의 파상적인 경제적 공세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그 강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역시 예고되어 있다. 미국과 서구가 러시아와 반목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지만, 그 효과는 의문시된다. 우크라이나가 자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자립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고, 외부의 지원으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외국의 지원을 받아 국가적 부흥을 이룩한 나라가 실제로는 전무한 것이 역사적 실례이다. 안보 없는 경제건설은 무기력하고, 경제성장 없이 국방력 증강도 불가능하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경제와 국방의 기초를 다지고,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어야 러시아에 대적할 수 있다. 아직 우크라이나에게는 러시아에 저항할 만한 여력이 많지 않기에 차분히 단계를 밟아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한반도 남쪽에서는 북한이 마지막 심정으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일어날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한반도 북쪽에서는 내부적인 격변이 일어나 정권이 와해되거나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남쪽에서의 전쟁보다는 북쪽에서의 급변 사태가 여러모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급변에 대해 면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북한 급변 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화시키면서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에 바탕을 두는 체제형식으로 북한이 이행할 수 있도록 중국이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한국이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중국이 북한 급변 시 개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 차선으로 UN을 통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만일 중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국적군의 구성에 의한 북한 개입으로 방향을 정해 추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중국이 전제왕조국인 북한을 이웃에 두는 것보다 자유 대한민국을 이웃 국가로 삼을 때, 왜 도움이 되는 지를 설파하는 편이 우리에게서 확고한 정당성의 근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

들이 주장했듯이, 북한 급변 시 중국의 무력 개입을 당연시하고, 이 같은 상황의 도래를 막지 못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는 관념은 일종의 대중국 사대주의적 관점의 연장이고, 우리의 장래를 위해 불필요한 확신이기도 하다. 결국 한국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리는 작업을 필두로 북한 급변에 대비해야 한다. P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67차 전문가포럼|

유라시아의 지각 충돌, 크림반도의 위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Notes